
콜롬비아 반부패 타당성조사사업 최종협의

- 출장결과 보고 -

2021. 12. 7.

국 민 권 익 위 원 회

I 출장 개요

□ 출장 개요

- (배경)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모델 수립을 통한 향후 콜롬비아 등 개발도상국 반부패 시스템 보급 확산 기반사업추진
 - 콜롬비아 반부패 타당성조사사업 프로젝트 성과 발표 및 최종보고회 참석
 - 현지 반부패 기관 담당자와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모델 최종 산출물에 관한 논의를 통한 완성도 제고 등

※ 행정안전부 ‘글로벌 전자정부 수출강국 공고화’ 실현을 위해 부처·기관 우수시스템 해외진출 지원사업

- (일시/장소) '21.11.21~11.28(5박 8일) / 콜롬비아

- (출장자) 국민권익위원회(홍원태 전산사무관)

□ 출장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일 정	비 고
11.21 [일]	인천 00:55	보고타 14:30	※ 인천 → 암스텔담 → 보고타	
11.22 [월]	09:00	14:00	○ 투명성 사무국 방문 - 출장 중 수행 업무 설명, 일정 협의 - 최종보고회 준비상황 점검 협의	Camilo Jaimes 고문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zate 기술고문 Nicolas Valencia 컨설턴트 Rocio Comez 팀장
11.23. [화]	08:30	12:30	○ 투명성 사무국 방문 - 최종보고회 준비상황 점검 협의 - 시험 테스트	Gustavo Gomez 외교실장 ST Bar Lozano 사무국장 Camilo Jaimes 고문 Emanuel Ortiz 팀장

			- 최종보고회	Rocio Comez 팀장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고문 William Molina 엔지니어 Néstor Valencia 컨설턴트 Luisa Corrale 컨설턴트
	12:30	14:00	○ 투명성 사무국 업무협의 - 투명성 사무국 업무협의 내용점검 - 유관 기관 협의대상 등 논의	Camilo Jaimes 고문 Emanuel Ortiz 팀장 Rocio Comez 팀장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 William Molina 기술 Néstor Valencia 컨설턴트 Luisa Corrale 컨설턴트
11.24. 주	09:00	12:00	○ 투명성 사무국 방문 1차 협의 - 타당성 보고서 현황분석 점검 - 타당성 보고서 개선 사항 점검	Beatriz Lozano 사무국장 Camilo Jaimes 고문 Rocio Comez 팀장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고문
		14:30	○ 투명성 사무국 방문 연계방안 협의 - 반부패 표준모델 검토 - 콜롬비아 향후 반부패 모델 관련 최종 논의 - 연계기관 기본 방침 정리	
11.25. 목	09:00	12:30	○ 반부패 관련기관 방문(고위급) 협의 - 검찰, 3개 감찰원 대상 1차 검토안 설명 - 연계기관 기본 방침 설명 - 의견수렴	ST Beatriz Lozano 사무국장 Armando Navarro 팀장 검찰 FGN Martha Alejandra 공직감찰원 PGN Rosa Elvira 기업감독원 SS Victor Alfonso Romero 정보통신부 MinTIC Gerson, Natalia Albari
		17:00	○ 반부패 관련기관 방문(실무자) 협의 - 외부기관 연계 협의 - 사업추진 방안 등	투명성 사무국 ST Camilo Jaimes 고문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고문 검찰 FGN Alexandra Ladino 공직감찰원 PGN Cesar augotso Luis Fernando

				기업감독원 SS Victor Alfonso Romero 정보통신부 MinTIC Luiso, Nataqlia Albanil Thiago Grijó
11.26. 금	09:00		○ 향후 업무 협의 - 대사관 업무 연락 - 유엔 회의 참석 등 협의	
	보고타 16:05		※ 보고타 → 암스텔담	
11.28. 일		인천 18:00	※ 암스텔담 → 인천	

II 출장 내용

1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최종결과 보고회 준비

〈 방문 개요 〉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최종결과 보고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

◇ (일시 · 장소) 11.22. 부통령실 회의실(현지)

◇ (참석자)

- 한국
 - 홍원태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이종일 PM(KITC)
- 콜롬비아
 - 투명성 사무국 Camilo Jaimes 고문,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고문, Nicolas Valencia 컨설턴트, Rocio Comez 팀장

1. 상호인사

- 콜롬비아 : 한국에서 온 것을 환영하며,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관심이 많고, 한국의 선진사례를 받고 싶어 이 사업을 요청하였으며, 일정대로 상호 협력하여 잘 추진되기를 바램
- 한국 : 상호 추구하는 바가 같으니 그동안 준비된 것이 잘 마무리되어 다음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음

2. 전체 일정 및 업무 협의

○ 전체 일정 협의

- 주중 전체 일정 설명, 화요일(종료보고회), 수요일(내부업무 협의), 목요일(기타 연계 기관 회의, 회계, 공직 감사원, 기업 감사국, 통신부)

○ 최종보고회 행사준비 점검

-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은 일정이 겹쳐 참석이 어려움
- 콜롬비아 측에서는 외교부에서 한명, 투명성 사무국 국장 및 기타 인력 참석 예정
- Camilo: 최종보고가 길어지더라도 자세히 진행하기 바람

○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관한 협의

- 구축 방안으로 BPR/ISP와 구축 1단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 설명
- 일반적 방안인 1안(BPR/ISP와 구축사업을 분리하는 방안)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2안(BPR/ISP와 구축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의 장단점 등 설명

2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최종결과 보고회

〈 방문 개요 〉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최종결과를 콜롬비아 현지 관련기관 담당자 대상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11.23. 부통령실 회의실(현지), 온라인 미팅(한국)

◇ (참석자)

○ 한국

- 현지 : 홍원태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이종일 PM(KITC)
- 국내 : 국민권익위원회 김남행 사무관, 이태완 주무관, NIA

강예진 수석, 구본준 선임, KITC 최인영 이사, 손재경 이사, 황유림 연구원

○ 콜롬비아

- 외교부 Gustavo Gomez 제1외교실장,
- 투명성 사무국 Beatriz Lodono 사무국장, Camilo Jaimes 고문, Emanuel Ortiz 팀장, Rocio Comez 팀장,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고문, Wiliam Molina 엔지니어, Nicolas Valencia 컨설턴트, Luisa Corrole 컨설턴트

1. 인사말씀

- 콜롬비아 : 국가적 관심사항으로 모든 기관이 반부패 통합 시스템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 본 사업을 통해 정보의 공개·공유 공감대 형성되었고, 한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 :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양국의 프로젝트 팀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콜롬비아의 반부패 신고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안)으로, 이번 주 콜롬비아 실무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남은 기간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의 내실을 다져 향후 콜롬비아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주요 질의응답

- 2단계로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할 부분이 있음. 2단계 기능 개발에 필요한 정책, 법, 제도는 확인 가능한지
 - 최종보고서에 반영돼 있음
- 접수를 할 때 이메일, 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는데, 이것을

디지털화 한다면 전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지

- 신고 접수는 모든 방법을 그대로 사용, 다만 신고를 처리하는 내부적인 절차의 자동화(편리성) 개념이 제공됨

○ 모두가 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것인지

-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역할과 권한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짐

○ ST에서 조직을 갖추고, 5가지 기능(계획, 개발, 시스템 운영, 인프라 운영, 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함

- 역할에 대한 정의는 최종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것은 제시되지만 운영과정에 개선 발전 시켜야 함

○ 예산 내역에 나온 재원은 누가 담당하는지.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듯 함

- 현재 표에는 한국 정부에서 사용할 예산만 표기되어 있음
예산에는 공여국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수혜국이 부담하는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도 차후 포함될 예정

○ 사업실행계획(안)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 3년 계획: (1차년) BPR/ISP, (2차년) 실행1, (3차년) 실행2

- 2년 계획: (1차년) BPR/ISP + 실행1, (2차년) 실행2

- 한국의 경우 BPR/ISP 필수, 3년 사업을 권장하지만, 콜롬비아의 정치적 여건 등 필요시 단축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짧은 기간을 선택하면, 비용 감축이 있는지와 관련 전체 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고, 단지 3년에 나눠쓸 금액을 2년에 사용하는 것

- 비용산출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알려줄 수 있는지와 관련 근거는 있지만, 아직 조정중이기 때문에 큰 골격이 완성

되면 제공할것음

- 예산 부분은 타당성 조사사업 종료 후 정부기관에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항목별 기능요소를 도출하고, 전체 비용을 도출함. 사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상세 자료가 나올 것
- 착수와 관련 정권교체 시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입장에선 어떤 옵션을 바라는지와 관련 3단계를 권고함
- 만약 옵션(2)를 선택할 경우 한국 정부의 예산이 주어지는 것은 2023년인지와 관련 시점은 동일하게 2023년 시작가능
- 타당성 조사사업 결과를 가지고 향후 예산확보 일정은 22년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예산 신청, 이후 외교부의 ODA사업 심의 거쳐 예산 확정되면, 9월에 국회에 제출, 12월에 확정, 23년도 1월부터 사업 진행 가능
- 타임라인이라면 구축사업은 어차피 차기정부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옵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하며, 더욱 안전하게 3년 계획으로 가는 것이 좋겠음
- 정권교체기에 수장이 바뀌면, 기관의 수장들도 바뀌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 할 시간이 필요하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가장 안전한 것은 3년 계획이 좋겠음
- 콜롬비아가 이집트에서 열리는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부통령님께서 특별히 콜롬비아의 반부패 시스템의 개발현황과 유용성에 대해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홍보하고자 함. 여기에 한국 정부에서 공동참여(협력)를 해줄 수 있는지(12월 13일)
- 시기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정보공유를 해 주시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본국과 협의하여 귀국전 답변 전달 가능

〈 면담 개요 〉

2021.11.24.(수)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실행계획 협의

◇ (일시 · 장소) 11.24. 09:00~14:00, 대통령실 4회의실

◇ (참석자)

- 한국
 - 홍원태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이종일 PM(KITC)
- 콜롬비아
 - 투명성 사무국 Beatriz Lodono 사무국장, Camilo Jaimes 고문, Rocio Comez 팀장,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 고문

1. 주요 협의 내용

- 연차별 추진계획 정리, MOU 추진계획, 타 기관 연동(검찰, 감찰원 등), 기존 시스템 활용 방안 (H/W), UN 회의 협력 내용확인

2. 질의응답

- 기존 시스템에 대한 협의
 - 기존 시스템(데이터, 하드웨어 등)을 폐기하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 기존의 것을 모두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확장, 발전하는 것임
 -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하드웨어의 추가 투입도 고려하는 것인지? 클라우드의 경우 이미 보유한 하드웨어를 이용

하는 것이므로 왜 하드웨어를 언급해야 하는지?

- 기존 하드웨어를 파악해야 추가로 시스템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음
- 타 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에 연동될 때 편리하게 하면 참여가 용이하지만 불편하게 한다면 부작용이 생김
- 신규 시스템으로 인한 편리함과 이용효과 제공으로 부담을 줄일 것이고, open API, X-Road를 활용하여 부담이 없음

○ 사업 추진 계획

- 어제 논의한 대로 옵션 1(3년간 추진하는 사업)로 진행하기 바람
- 정권 교체시 새로운 인력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어야 함

○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양국 기관의 관점에서 MOU는 모두 필요, 한국은 예산 승인에 필요하며, 콜롬비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의 입장에서 필요함
- MOU는 국민권익위원회-ST간 체결하며, 1~2월에 양국 기관간 협약에 사인할 필요가 있음
- PCP를 첨부물로 작성, 사업자가 지원을 하며, MOU 사인 방법(방문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 독립기관의 연동 (검찰, 감찰원)

- 4개 기관과의 연동의 범위, 방식에 대하여 ST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 3개 연계 기관은 1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1단계는 모든 행정기관(행정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며, 3개 기관은 2~3단계 대상임
- ST 입장은 PACO를 행정부처 차원에서 확대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것이 되어야

함(독립기관 포함)

-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조직이 존재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개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음. 사용은 권한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분해서 개발할 필요가 없음
- 기관별로 신고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 기존 것을 포기하게 하거나, 접속에 불편하게 하면 안 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스템(PACO)을 사용하게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편리함 제공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한국에서는 특수 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지?
- 어느 기관이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확보되어 있음, 그러나 제대로 활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모두가 만족 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바로 온라인과 서면으로 처리하게 하되 둘 중의 하나만 온라인이 되면 상대도 온라인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서 시스템이 만족되도록 운영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독립 기관이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하게 했는가?
- 공통의 표준신고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계 등을 위해선 법적 지원이 필요함
- 검찰같이 독립된 신고시스템을 가진 조직이 PACO를 이용할 이유가 있는가?
- 반부패 신고를 하는 시민은 한곳에서 신고를 하고 공공기관은 여기에 통합적으로 연동되어 개별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모든 국가 기관이 이용해야 하는 것임
- 검찰이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지 못하고 있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범죄에 대한 신고를 PACO를 통해서 했을

때 검찰이 이용할 수 있을까?

- 그래서 공통 표준화가 중요함, 표준화해 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지며, 필요시 공통코드를 기관별로 재정의해서 쓸 수 있음

○ 모듈화의 개념 설명

- PACO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함, 이 경우는 기관간 협의에 의하여 연동 가능하며, 검찰 등 3개 독립기관과의 연계는 별도의 과제로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는 강제화한 것이 아니고 편리한 기능을 만들어 놓고 관계된 기관에서 온라인 처리가 관계 기관에 정보로 쌓이도록 한 것임
-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모듈, 프로세스, 데이터의 모듈화, 신고유형의 모듈화, 사용자의 권한 관리 등이 모듈화 개념이 중요함
- 권익위원회와 타 기관(검찰 등)과의 시스템 연동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법은 어떻게 되는가?
-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과 정보 공유는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음

○ 시스템 운영 환경

- PACO가 운영되는 물리적 운영환경은 누가 운영하는가?
- ST는 향후 4년치 예산을 수립하며, 내년에 차기 4년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함. 1년 전에 향후 사업 예산을 신청해야 하며, 내년/후년 예산을 수립되어 있음. 클라우드 서비스, 하드웨어, 유지보수 예산이 할당되어있음. ST에서 대통령실에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부적으로 자원/예산을 인정하여 투자함.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4년 예산에 반영하므로,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알아야 예산에

반영함

- 기존 시스템(H/W)의 사양과 현 용량을 알아야 신규 PACO로 인하여 추가되는 요구 용량에 대한 서비스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음. 기존 시스템의 사양과 용량을 알려주기 바람
- 내부의 정보관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함

○ 예산 수립방안

- 소요되는 H/W의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의 사양, 용량, 여유 용량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함
-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는 시험 등을 위하여 독립적 환경이 필요 함

○ 내일의 아젠다와 목표 (타기관)

- 전체 사업을 소개하고, 이용기관으로써의 이해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용자의 관점: PACO vs. 이용자 (시민, 행정기관, 검찰 등)
- 정보공유자의 관점
- 프로세스: 서비스 차원에서의 공동 협조의 관점

○ 로드맵 제시

- 행정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확장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점을 반영
- 반부패 정책부분인 부패영향평가 적용과 법령정보를 통합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 3개 기관 (공공서비스 감독국, 공직감찰원, ST)이 관련되어 있으며, ST는 부패 관련하여 취약성이 있는 법에 대하여 부통령, 대통령실에 보고하여 처리함. 법령은 의회가 가장 빠르게 제공함(의회 비서국 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면담 개요 〉

2021.11.25.(목)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실행계획 관련 연계기관 고위급 업무협의

◇ (일시 · 장소) 11.25. 09:00~12:30, 대통령실 2회의실

◇ (참석자)

- 한국
 - 홍원태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이종일 PM(KITC)
- 콜롬비아
 - 투명성 사무국 ST: Beatriz Lodono 사무국장, Armando Navarro 팀장
 - 검찰 FGN: Martha Alejandra
 - 공직감찰원 PGN: Rosa Elvira
 - 기업감독원 SS: Victor Alfonso Romero
 - 정보통신부 MinTIC: Gersson, Nataqlia Albanil

1. 독립기관 설명회(고위급)

- 그동안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음
오늘의 발표 자료가 콜롬비아의 반부패 활동을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조사, 분석한 결과를 함께 발전시켰으면 좋겠음
- 모든 기관은 구분 없이 국가개발정책과 평화협약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업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며 타당한 일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시행령이 준비된다면 목표하는 바를 실현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바로 우리 기관들임

- ST와 MinTIC이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
이므로 특히 역할이 중요함
- 이번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한 정책관련자는 한국의 협조에
의한 컨설팅 프로젝트가 콜롬비아의 실정을 잘 반영했으므로,
관련 기관들이 함께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여기에 참여한 모든 결정권자는 반부패 시스템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결실을 맺을 것임
-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현실에
맞게 계산되어야 함
- 콜롬비아 측은 기관의 참여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었으니, 한국에서 빠른 지원이 있기를 바람

— < 면담 개요 > —

2021.11.25.(목)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실행계획 관련 연계기관 실무자 업무협의

◇ (일시 · 장소) 11.25. 14:30~17:00, 대통령실 2회의실

◇ (참석자)

- 한국
 - 홍원태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이종일 PM(KITC)
- 콜롬비아
 - 투명성 사무국 ST: Camilo Jaimes 고문, Armando Navarro 팀장,
Gabriel Alzate 기술고문
 - 검찰 FGN: Alexandra Ladino
 - 공직감찰원 PGN: Cesar augotso, Luis Fernando
 - 기업감독원 SS: Victor Alfonso Romero
 - 정보통신부 MinTIC: Luiso, Nataqlia Albanil, Thiago Grijo

1. 독립기관 설명회(실무급)

- 최종산출물 콜롬비아와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사업완료시 상호 산출물에 대한 검증 시간이 있으며 최종 확정되면 공식 제공 될 예정임
- 본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22년 ODA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23년부터 사업착수 가능 할 것임
- 제공하려는 표준신고시스템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와 같아 반부패 업무의 다양한 여건을 수용하며 공공기관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
- 기관의 독립성 유지방안
독립성 유지를 위해 '관리적', '업무 처리적' 관점으로 구분되어 운영할 수 있는 체계 유지
- ST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모든 업무처리는 기관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됨
- 독립성을 위해 개별 기관은 인증된 “기관관리자”가 지정되어 독립적으로 시스템 모든 기능을 관리 함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반부패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콜롬비아로부터 반부패 기술 및 재정 협력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글로벌 전자정부 수출강국 공고화 실현을 위해 부처·기관 우수시스템인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 추진 목적에 부합되며

- 국민권익위원회 구축 운영중인 반부패 ‘표준신고시스템’을 해외에 진출시킨다면 해당 국가의 부패예방과 해소 뿐 아니라, 유엔반부패협약 등 범세계적 부패예방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타당성조사 사업과정에도 콜롬비아 ‘투명성 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반부패 사업으로 콜롬비아의 국가적 관심 사항이기에 모든 기관이 반부패 통합시스템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되었음
- 본 사업을 통해 정보의 공개·공유 중요성 등 한국의 경험을 통해 콜롬비아의 반부패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음
- 회의에 임하는 콜롬비아 담당자들의 열정과 자료준비로 인하여 상호 원하는 반부패 미래 청사진이 만들어 졌음
- 한발 더 나아가 '21.12.13. 개최하는 제9차 UNCAC 총회 콜롬비아 주최 행사에서 한국의 디지털 반부패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구축과정 등 이번 사업의 결과를 소개 할 예정임
- 이번 콜롬비아 수출 사업을 통해 마련되는 표준신고시스템은 향후 중남미 등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범세계적 부패예방 노력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참고 1

주요 행사 사진

콜롬비아 최종보고회



일 시	2021년 11월 23일	작 성 자	(소속) KITC (이름) 황유림
장 소	부통령실 회의실(현지), 온라인 미팅(국내)	종 류	국내 완료보고회
참 석 자	- <u>홍원태</u>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 <u>이종일</u> PM, KITC - <u>김남행</u> 사무관, 국민권익위원회 - <u>이태완</u> 주무관, 국민권익위원회 - <u>강예진</u> 수석, NIA - <u>구본준</u> 선임, NIA - <u>최인영</u> 이사, KITC - <u>손재경</u> 이사, KITC - <u>황유림</u> 연구원, KITC - <u>Gustavo Gómez</u> 제1외교실장, 외교부 - <u>Beatriz Lodono</u> 사무국장, 투명성 사무국 - <u>Camilo Jaimes</u> 고문, 투명성 사무국 - <u>Emanuel Ortiz</u> 팀장, 투명성 사무국 - <u>Rocio Comez</u> 팀장, 투명성 사무국 - <u>Armando Navarro</u> 팀장, 투명성 사무국 - <u>Gabriel Alzate</u> 기술고문, 투명성 사무국 - <u>Wiliam Molina</u> 엔지니어, 투명성 사무국 - <u>Nicolas Valencia</u> 컨설턴트, 투명성 사무국 - <u>Luisa Corrole</u> 컨설턴트, 투명성 사무국		